2009년 제2차 EAI 중앙선데이 한국리서치 공동 파워 정치인 신뢰영향력/ 개헌관련 조사결과

■ 어떻게 조사했나

EAI 중앙선데이 한국리서치 공동 **"제2차 파워정치인 신뢰영향력 조사"**는 국민들이 평가한 주요 정치지도자들의 '영향력' 과 그들에 대한 '정치적 신뢰' 크기를 좌표축으로 삼아 한국 정치리더십의 지형도를 새롭게 그려보고자 한다. 한국 정치를 이끌고 있는 국정의 수장인 대통령, 정당 정치를 대표하는 여당 및 유력 야당의 당 대표, 차기 유력 대선후보(최근 조사에서 5% 이상 지지율을 기록한 정치인)을 중심으로 조사 대상을 선정했다. 이 외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우 현재까지 현실정치에서 야권 및 호남지역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치적 리더십 지형을 이해하는 데 분석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총 10명의 조사 대상에 포함 시켰다.

분석틀은 2007년 6월 대선정국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실시했던 제1차 파워정치인 신뢰영향력 조사의 틀을 원용했고 6명의 정치인은 두 조사 공히 조사 대상에 포함시켜 정권교체 전후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도 가능하게 했다. 영향력 조사는 '다음 000가 현 정국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전혀 영향력 없음' 0점과 '매우 영향력 높음' 인 10점 사이에서 선택하도록 했다. 신뢰도 역시 '다음 000를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매우 불신' (0점)과 '매우 신뢰' (10점) 사이에서 응답토록 해 평균 점수를 산출했다.

이와 함께 보다 **"성숙한 개헌"** 논의에 도움이 되고자 실제 국민들이 개헌에 대해 갖고 있는 관심도와 함께 특정 국가권력구조를 선호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현재의 개헌논의가 얼마만큼 국민적 공감대에 기초하고 있는 지 어떠한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는 개헌안이어야 하는 지 살펴보고자 한다. 조사 문항은 2005년 연구들을 활용하였다.

조사개요

▲ 추출 방법 : 각 샘플별 성/연령/지역별 인구수 비례 할당 추출
▲ 표본 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최대 ±3.5%p
▲ 조사 방법 : 전화조사(CATI)
▲ 조사 기관 : 한국리서치
▲ 조사대상

일자	조사대상
2009. 7. 25 (800명)	**1. 이명박 2. 김대중** 3. 김형오 4. 박희태 5. 정세균 **6. 이회창 7. 박근혜 8. 유시민** 9. 정몽준 **10. 정동영**
2007. 6. 26-27 (944명)	**1. 이명박 2. 박근혜 3. 김대중** 4. 김영삼 **5. 이회창** 6. 노무현 7. 손학규 **8. 유시민** 9. 이해찬 **10. 정동영** 11. 한명숙

* 굵은 글씨는 1차, 2차 조사 공통으로 조사대상에 포함된 정치인

■ 참여연구진

이내영 (EAI 여론분석센터소장, 고려대)、이숙종(EAI 원장, 성균관대)、정원칠(EAI)、정한울(EAI)

1. [요약] 삼중의 위기 겪는 한국 정치 리더십 : 신뢰도 영향력 조사

이내영(EAI 여론분석센터 소장, 고려대) · 정한울(EAI 여론분석센터 부소장)

파워정치인 10명 신뢰영향력 조사 : 리더십의 부재 정치불안 만성화로 귀결
영향력 : 이명박 1위 〉 박근혜 2위 〉 김대중 3위 〉 정세균 4위 순
신뢰도 : 박근혜 1위 〉 김대중 2위 〉 이명박 3위 〉 유시민 4위 순

현 정국에서 가장 영향력을 행사하는 빅3 정치인은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전대표, 김대중 전대통령 순으로 나타났다. 신뢰도에서도 박근혜 전대표와 김 전 대통령이 전국적으로 고른 지지를 받아 1, 2위를 차지했고, 이 대통령이 그 뒤를 이었다. 노 전대통령 서거 이후 정국혼란의 중앙에 있었던 정세균 민주당 대표, 유시민 전 장관, 김형오 국회의장,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의 경우 희비가 엇갈렸다. 유 전 장관은 영향력은 낮지만 신뢰도에서는 일약 4위로 뛰어올랐고, 정대표는 영향력 4위, 신뢰도 5위로 빅3 다음의 자리로 올라섰다. 반면 김 의장과 박희태 대표는 신뢰도에서 최하위권으로 떨어졌다.

중앙선데이, 동아시아연구원(EAI 원장 : 이숙종), 한국리서치가 공동으로 27월 25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800명 대상으로 유력 정치인 10명이 현 정국에 미치는 영향력과 신뢰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다. 조사는 이들 정치인의 영향력과 신뢰도 각각에 대해 '전혀 없다' (0점)에서 '매우 높다' (10점) 사이의 점수를 매기도록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10점에 가까울수록 영향력 또는 신뢰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 최고의 유력 정치인 10명을 뽑아 조사했지만 10명의 평균 영향력 점수가 10점 만점에 4.3점, 평균 신뢰도 점수는 3.7점으로 낙제 점수다.

이번 조사 결과는 한국 정치리더십의 위기상황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첫째, 정당성의 위기다. 정부, 국회, 여당 등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도자일수록 영향력 대비 신뢰도가 낮았다. 이명박 대통령이 영향력에선 6.15점으로 1위였지만, 신뢰도는 4.27점으로 3위에 그쳤다. 영향력 대비 신뢰도가 낮아지면 권력행사의 정당성이 약해진다는 점에서 우려스러운 결과다. 대통령의 향후 정국 주도력 행사가 쉽지 않음을 예고한다. 영향력 5위(4.02점), 6위(4.01점)였던 김형오 국회의장과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도 신뢰도에선 각각 8위(3.38점)와 10위(3.18점)에 그쳤다.

둘째, 제도화의 위기다. 공식적인 조직의 대표들보다 현직에 있지 않은 유력정치인의 영향력이 크게 나타나면서 퇴행적인 막후 정치가 작동하는 현실도 보여준다. 박근혜 전대표와 김대중 전 대통령은 영향력과 신뢰도 모두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박 전 대표는 영향력은 5.61점으로 2위였지만, 신뢰도는 5.01점으로 1위에 올랐다. 지역적으로

서울, 인천, 충청, 영남권에서 신뢰도 1위에 올랐고 호남에서도 5위를 기록했다. 세대별로도 40대, 50대 이상 뿐 아니라 20~30대에서도 박근혜 대표는 고른 신뢰를 받았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본인의 건강문제나 현직이 아니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영향력 4.87점으로 3위, 신뢰도 4.74점으로 2위에 올랐다. 야권에서는 현직 정치인들과도 비견할 수 없는 강한 영향력과 신뢰도를 보여줌으로 향후 야권의 재편과정이나 차기 대권구도에서 실질적인 영향력 행사가 예상된다. 야권의 한 축을 담당했던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하면서 야권 지지층의 기대가 집중된 결과로 보인다.

셋째, 안정성의 위기다. 이번 정부에서도 역대정부와 마찬가지로 집권진영의 리더십은 끊임없이 불신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반대파에 힘이 실리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2007년 조사에서도 당시 여권 정치인의 신뢰도는 낮고, 보수성향의 정치인이 신뢰도 상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정권교체 후 현 집권층인 보수성향의 지도자들은 신뢰도가 떨어지고, 반대편 지도자들에 대한 신뢰가 급상승하고 있다. 2007년 신뢰도 4위였던 김대중 전대통령이 2위로, 신뢰도 꼴찌였던 유시민 전장관이 4위로까지 뛰어오른 것이 대표적 예다.

결국 한국의 정치리더십의 위기는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도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지도자들이 적기 때문이다. 이 결과 한국정치에서 여야의 극한대립이 일상화되고 국민들의 불신이 어느 때 보다 깊어지고 있지만, 이를 해결하려는 용기와 능력을 가진 지도자는 드물고 고착상황은 지속되고 있다. 정치적 힘이 있으면서도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주는 지도자들이 많아져야 한국 정치권이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생산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

효율성 보다 균형과 안정 이루는 개헌 바란다

최근 정치권과 학계를 중심으로 개헌논의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개헌이 궁극적으로는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민들이 실제 얼마나 개헌문제를 피부로 절감하고 있는지, 개헌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와 이익은 무엇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선 개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살펴보면, 우리 국민 중 열명 중 여섯 명(59.8%)이 개헌문제에 관심이 있다고 답했다(매우 관심있다 17.1%, 대체로 관심있다 42.8%). 노전대통령 서거, 비정규직 법안파동, 미디어법 진통, 쌍용자동차 사태 등 굵직한 정치사회 현안을 감안하면 국민들의 관심이 적지 않음을 보여준다.

선호하는 권력구조에서는 대통령이 외치를 담당하고 의회가 내치를 담당하는 분권형제를 선호하는 응답이 45.2%로 가장 많았다. 반면 책임과 권한을 대통령에 집중하는 순수 대

통령제 선호는 17.3%, 의회에 책임과 권한을 집중하는 의원내각제는 26.4%의 지지를 받았다. 다수 국민들이 대통령제에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순수대통령제 대신 의회권력과 대통령 권력이 균형을 이뤄 안정을 이루는 제도를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민들은 대통령제가 유지되더라도 현행 5년 단임제(30.2%) 보다는 4년 중임제안(35.5%)에 대한 선호가 많았고, 4년 중임 정부통령제 안은 19.2%, 5년 단임 정부통령제는 9.0%에 불과해 부통령제 신설에는 부정적이었다.

응답자 자신이 특정한 권력구조를 선호하는 이유를 물어본 결과 국민들의 개헌을 통해 얻고자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와 가치는 '안정적인 국정운영'과 '민의의 반영'이었다. 우선 가장 많은 국민들이 선호하는 분권형제를 주장하는 응답자들 중 50.5%가 안정적 국정운영이 가능해서를 선호이유로 꼽았고, 23.5%가 민의를 잘 반영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반면 국민통합에 유리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은 19.4%, 강력한 지도력이 가능해서라는 응답은 3.3%에 불과했다. 순수내각제를 선호하는 응답자들 중에서는 36.2%가 '국정안정'을 꼽았고, 35.0%는 내각제가 민의를 잘 대변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반면 '국민통합'은 17.7%, '강력한 지도력'을 강조한 응답은 7.3%에 그쳤다. 순수 대통령제 선호자 가운데서는 강력한 지도력 발휘가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42.0%로 가장 많았지만 안정적 국정운영을 선호이유로 꼽은 비율도 37.5%였다.

2. 기초분석1.

2009 한국 리더십 지형 분석

한국정치, 신뢰할 만한 힘 있는 리더가 없다

정한울 · 정원칠

■ **파워정치인 10인 2009년 신뢰도, 영향력 조사결과 : 집권하면 신뢰 잃어**

영향력 : 이명박 1위 〉 박근혜 2위 〉 김대중 3위 〉 정세균 4위 순
신뢰도 : 박근혜 1위 〉 김대중 2위 〉 이명박 3위 〉 유시민 4위 순
유시민 · 정동영 영향력 최하위권, 미디어법 주도한 김형오 · 박희태 신뢰도 최하위권

영향력				신뢰도			
2009 순위	정치인	점수	2007 점수(순위)	2009 순위	정치인	점수	2007 점수(순위)
1	이명박	6.15	6.24(1)	1	박근혜	5.01	5.38(2)
2	박근혜	5.61	5.7(2)	2	김대중	4.74	3.96(4)
3	김대중	4.87	4.48(3)	3	이명박	4.27	5.64(1)
4	정세균	4.11	-	4	유시민	4.04	2.16(11)
5	김형오	4.02	-	5	정세균	3.84	-
6	박희태	4.01	-	6	이회창	3.69	4.17(3)
7	정몽준	3.95	-	7	정몽준	3.55	-
8	이회창	3.89	3.69(5)	8	김형오	3.38	-
9	유시민	3.79	2.16(11)	9	정동영	3.26	2.76(9)
10	정동영	3.27	2.81(9)	10	박희태	3.18	-
평균		4.3	4.0	평균		3.7	3.5

* 2007년 공란은 2009년 조사에 새로 포함된 조사 대상

▣ 이명박, 박근혜, 김대중 빅3 리더십 행사, 리더십에 대한 신뢰는 추락

▣ 여야 당대표, 국회의장, 차기 대권주자 등 파워정치인 영향력 신뢰도 모두 낮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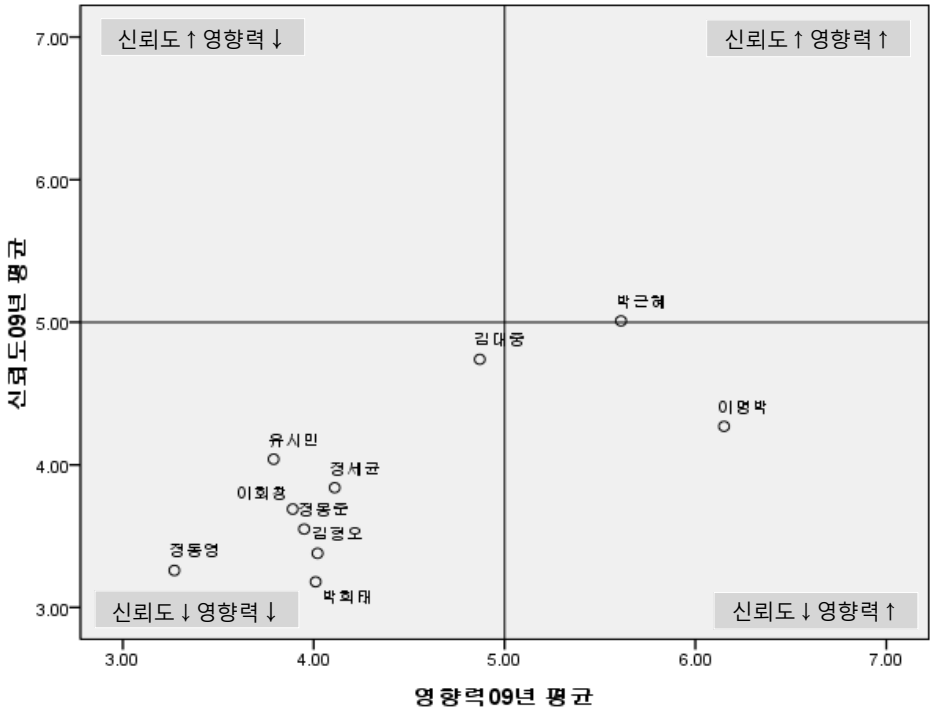
한국 정치리더십의 위기가 심각하다. 2007년에 이어 2년 만에 실시한 파워정치인 신뢰영향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이 심각하다. 동아시아연구원과 중앙선데이, 한국리서치는 현 정국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전현직 대통령과 대권주자, 현직 국회의장, 현직 정당대표 등 한국 파워정치인 10명을 선정하여 영향력과 신뢰도에 대해 물어보았다. 최소 0점에서 최대 10점까지로 평가한 이번 조사에서 5점은 중간수준을 의미한다.

영향력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10점 만점에 6.15점을 받아 1위, 박근혜대표가 5.61점으로 2위, 김대중 전대통령이 4.87점으로 3위에 들어 한국정치의 리더십 빅3를 형성했다. 최근 비정규직법, 미디어법 통과과정에서 갈등의 한복판에 있었던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4.11점을 받아 4위, 김형오 국회의장과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가 각각 4.02, 4.01점을 받아 중위권에 위치했다. 차기 대권주자인 정몽준 최고위원과 이회창 대표가 각각 3.95점, 3.89점으로 뒤를 이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정국 이후 친노진영의 대표주자로 떠오르고 있는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3.79점으로 9위, 현재 무소속이 된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대표는 3.27점으로 영향력에서는 최하위권에 위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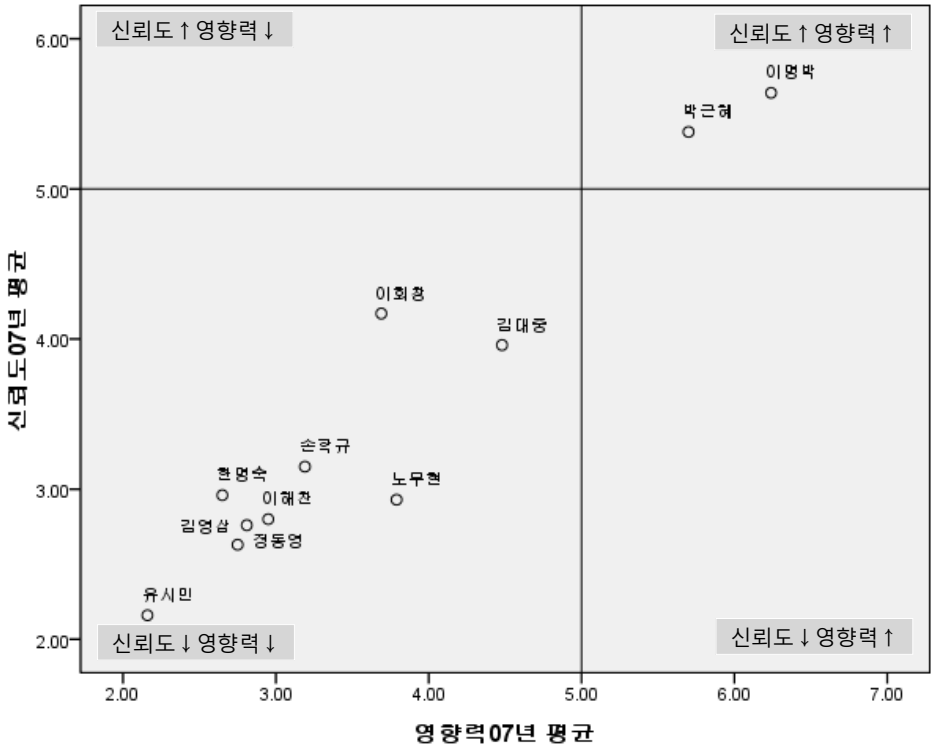
한편 신뢰도 차원에서 보면 박근혜 대표가 10점 만점 중 중간 수준인 5.01점을 받아 1위였고, 김대중 전대통령이 4.74점으로 2위였다. 영향력 차원에서 1위였던 이명박 대통령은 4.27점으로 3위로 내려 앉았다. 집권초기부터 촛불시위 등으로 정치적 신뢰기반이 붕괴하다시피한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 급격한 신뢰도 평가의 악화는 상당부분 예견된 바 있다.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4.04점으로 낮은 영향력에 비해 상당히 높은 신뢰도를 받고 있다. 정세균 대표가 3.84점, 이회창 총재가 3.69점, 정몽준 최고위원이 3.55점으로 중하위권에 머물렀다. 지난 보궐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정동영 전대표는 3.26점으로 10명 중 9위였다. 최근 미디어법 강행처리의 주역 김형오 국회의장과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가 각각 3.28, 3.18점으로 8위와 10위를 기록하여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결국 한국리더십의 위기는 현재 국민의 신뢰에 기반하여 강한 리더십을 발휘할 정치지도자가 없다는 점에 있다. 다만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전대표가 영향력에서는 5점을 훌쩍 넘기며 국민들로부터 힘 있는 지도자로 인정받고 있지만 그에 비해 신뢰도는 낮은 유형으로 볼 수 있다. 다른 정치인들의 경우 대부분 특별한 영향력도 행사 못하고 신뢰도 받지 못하는 정치인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이다. 다만 올해 현실정치에 적극적으로 발언의 수위를 높여 온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나마 정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치인으로 평가받고 있는 셈이다.

[그림1] 2009년 주요지도자 신뢰영향력 지형



[그림1] 2007년 주요지도자 신뢰영향력 지형



▣ 정권교체이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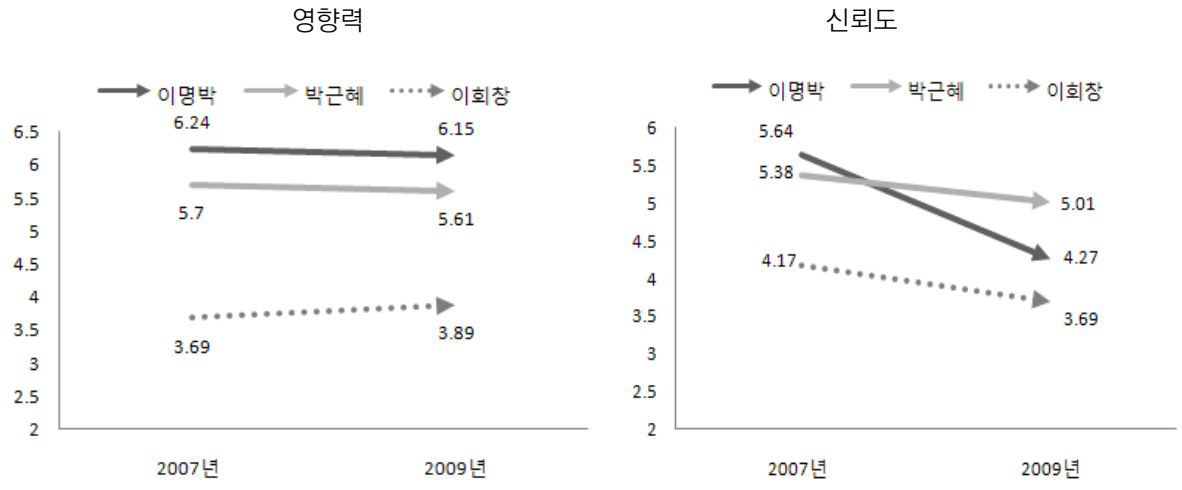
- 보수성향 지도자 영향령 정체, 신뢰도 하락, 진보성향 지도자 영향력 및 신뢰도 상승

- 이명박 박근혜 불신 커지고, DJ, 유시민 지도력 부상, 정동영은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러

지난 2007년 조사와 비교해보면 주목할 점이 발견된다. 집권세력의 지도자는 국민들의 비판에 직면하여 영향력과 신뢰를 잃는 반면 야권 지도자는 이러한 비판에 편승하면서 영향력과 신뢰를 회복하는 패턴이 발견된다.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은 결국 성공한 대통령, 성공하는 리더십이 자리잡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우려스러운 결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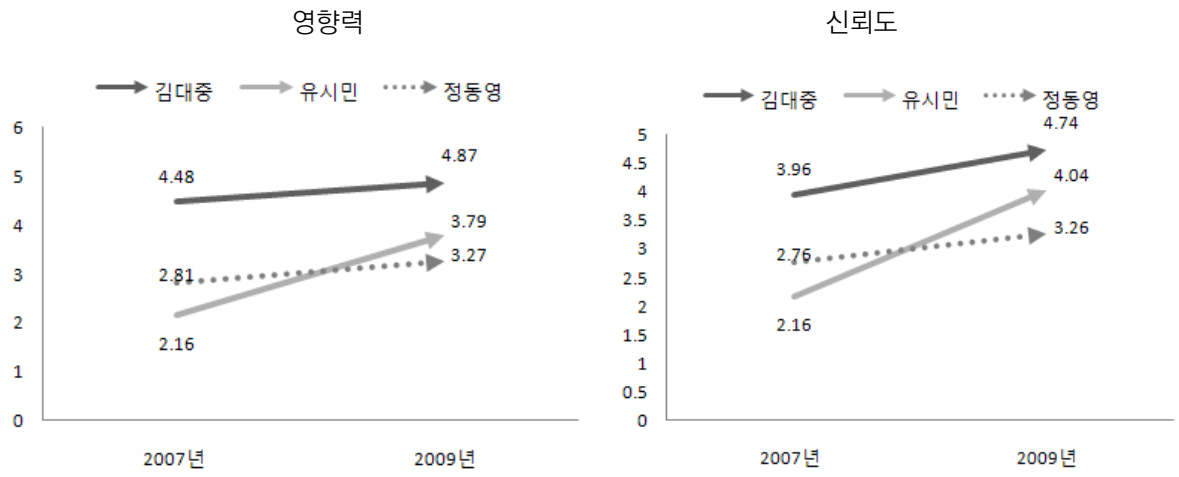
현 집권세력인 보수성향의 정치지도자들의 경우 영향력은 대체로 정체된 반면 신뢰도에서는 급격한 추락현상이 확인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7년 대선후보 당시 영향력에서 6.24점을 받았고, 박근혜 전 대표 역시 5.70점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바 있다. 다소 평가점수가 낮아지기는 했지만 크게 줄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이회창 총재의 경우 대선 정계복귀 이전 시점인 2007년 조사에 당시 3.69점에 그쳤지만 현재 제2야당의 총재로서 3.89점을 받아 다소 높아졌다. 그러나 이들 모두 현 정부 하에서 신뢰도 점수를 잃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 2007년 조사에서 5.64점으로 신뢰도 1위였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4.27점까지 떨어졌다. 박근혜 대표와 이회창 총재도 2007년에 비해 각각 0.27점(5.38→5.01점), 0.48점(4.17점→3.69점)씩 떨어졌다. 박근혜 대표의 신뢰도 하락은 당내 가깝게는 미디어법안 과정에서 보여준 행보와 길게는 현 정부 내에서 계파갈등 과정에서 여당과 국정의 지도자 이미지 보다는 특정계파의 수장 이미지가 강화되고 정치지도자로서의 책임보다는 대권행보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일부 여론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림1] 정권 교체 후 이명박, 박근혜, 이회창 영향력 신뢰도 변화



반면 진보성향의 정치인들은 정권을 잃은 후 영향력과 신뢰도가 회복되는 경향을 보여준다. 영향력에서 김대중 전대통령은 2007년 4.48에서 2009년 4.87로 영향력도 높아지고, 신뢰도 역시 2007년 3.96에서 2009년 4.74점으로 적지 않은 상승을 경험하고 있다. 유시민 전 장관의 부상은 더욱 두드러진다. 지난 2007년 조사에서 영향력과 신뢰도 각각 2.16점을 받아 11명 전체 조사대상 중 꼴찌에 그쳤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는 영향력 9위에 그치기는 했지만 3.79점으로 무려 1.63점이나 높아졌다. 신뢰도 역시 4.04점을 받아 일약 빅3 다음으로 신뢰받는 지도자로 일약 도약했다. 노무현 전대통령 서거로 노대통령에 대한 우호적인 정서가 형성된 가운데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친노진영을 대표하는 인물로 부각된 결과로 보인다.

[그림2] 정권 교체 후 김대중, 유시민, 정동영 영향력 및 신뢰도 변화



▣ 각 지역, 세대, 이념집단을 대표하는 리더는 누구?

지역을 기반으로 했던 3김 정치가 막을 내렸지만 여전히 지역은 정치인들의 주요한 자산이다. 특정 정치세력, 특정 정치인이 어떤 정치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지, 반대로 특정 지역과 특정 계층을 대표하는 정치인은 누구인지를 밝히는 것은 권력을 둘러싼 갈등구조를 이해하고 정치적 재편의 방향을 읽는 데 핵심변수가 된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특정 지도자들은 특정세대와 특정이념집단을 자신의 정치적 기반으로 삼고 정치적 리더십을 행사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30 젊은세대와 진보층을 정치기반으로 삼은 바 있으며 현 이명박 대통령은 기존의 한나라당 지지기반에 40대와 수도권 유권자를 자신의 정치기반으로 삼는 선거전술을 펼쳐 당선된 바 있다.

여당의 친이, 친박 계파갈등이나 한나라-자유선진 연합론, 노무현 전대통령 서거 이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는 야권내 정치재편의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특정 지역, 특정 세력을 대표하는 정치지도자가 누구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조사는 일반 조사와 달리 핵심 정치인 10명 각각에 대한 신뢰도 점수를 평가하게 함으로써 특정지역, 특정 집단에서 가장 신뢰받는 정치인이 누구인지, 신뢰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얼마나 강한 지 확인할 수 있다.

종합하면 보수층에서는 박근혜 전대표가 대다수 계층, 지역에서 국민들이 가장 신뢰하는 지도자로 꼽히고 있다. 최근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김대중 대통령 역시 전 사회적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신뢰를 받고 있다. 보수층에서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표를 대체할 신뢰할 만함 차기 혹은 경쟁력 있는 지도자가 눈에 띄지 않는 반면, 진보진영 등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에게 높은 신뢰를 보이고 추모정국 이후 유시민 전 장관이 그 뒤를 잇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국회의장,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 정몽준 최고위권 등은 국민들로부터 냉담한 반응을 받았다.

▣ 각 이념진영을 대표하는 가장 신뢰하는 지도자

진보진영 김대중 〉 유시민 〉 박근혜 순
중도, 보수층은 박근혜가 대표 지도자

박근혜,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전 이념계층에서 상위 랭크하면서 고른 신뢰받고 있다. 진보진영의 경우 유시민이 김대중 전대통령에 이어 높은 신뢰를 받고 있다. 유시민 전 장관은 중도진영에서도 4위에 올라 신뢰기반의 폭이 적지 않았지만 보수층에서는 9위에 머물러 이후 보수층의 비토를 예견하고 있다. 이번 미디어법을 주도한 김형오 국회의장과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의 경우 진보 진영과 중도성향의 유권자로부터 평가가 최하위권에 위치했다. 보수층에서도 김형오 의장은 6위, 박희태 대표는 7위로 중하위권에 그쳤다.

신뢰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9위	10위
진보진영 (182)	**김대중 (5.50)**	유시민 (4.71)	박근혜 (4.35)	정세균 (4.22)	정동영 (3.58)	정몽준 (3.31)	이회창 (3.23)	이명박 (3.18)	김형오 (2.81)	박희태 (2.57)
중도진영 (347)	**박근혜 (4.84)**	김대중 (4.69)	이명박 (4.07)	유시민 (4.04)	정세균 (3.80)	이회창 (3.60)	정몽준 (3.56)	김형오 (3.37)	정동영 박희태 (3.12)	
보수진영 (230)	**박근혜 (5.76)**	이명박 (5.52)	이회창 (4.24)	김대중 (4.16)	정몽준 (3.86)	김형오 (3.84)	박희태 (3.81)	정세균 (3.55)	유시민 (3.50)	정동영 (2.97)

▣ 각 지역에서 신뢰받는 지도자

이명박 대통령 신뢰도를 1위로 꼽은 지역이 한군데도 없음. 박근혜는 호남 및 강원/제주 제외하면 가장 높은 신뢰 받았다. 김대중 전대통령 호남의 압도적지지 외 전 지역에서 고른 지지를 받아 현실정치 영향력 행사의 원천이 되고 있다. 유시민 전 장관의 경우 지역구로 공들이고 있는 대구경북에서는 큰 호응을 받지 못했다. 대신 호남, 대전충청 권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신뢰를 받고 있다.

수도권은 박근혜 〉 김대중 〉 이명박 〉 유시민 순
대전충청 박근혜 〉 김대중 〉 유시민 〉 정세균 순, 이회창은 충청권 5위
호남 김대중 〉 유시민과 정세균이 2위, 3위 다퉈, 박근혜 5위
TK/PK 박근혜, 이명박 우위, 이회창과 김대중이 3, 4위
강원/제주 김대중 〉 정세균, 유시민 순

신뢰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9위	10위
서울 (170)	**박근혜 (4.78)**	김대중 (4.66)	이명박 (4.57)	유시민 (3.92)	정세균 (3.77)	이회창 (3.63)	정몽준 (3.46)	김형오 (3.34)	정동영 (3.12)	박희태 (3.08)
인천/경기 (220)	**박근혜 (4.84)**	김대중 (4.45)	이명박 (4.15)	유시민 (3.83)	정몽준 (3.67)	정세균 (3.52)	이회창 (3.40)	박희태 (3.14)	김형오 (3.13)	정동영 (2.97)
대전/충청 (80)	**박근혜 (5.38)**	김대중 (4.74)	유시민 (4.54)	정세균 (4.15)	이회창 (4.09)	이명박 (3.97)	정동영 (3.50)	정몽준 (3.48)	김형오 (3.15)	박희태 (2.94)
광주/전라 (83)	**김대중 (6.72)**	유시민 (4.72)	정세균 (4.71)	정동영 (4.47)	박근혜 (4.16)	김형오 (3.36)	이회창 (3.24)	정몽준 (2.84)	이명박 (2.53)	박희태 (2.52)
대구/경북 (84)	**박근혜 (6.01)**	이명박 (5.71)	이회창 (4.04)	김대중 (4.00)	정몽준 (3.90)	유시민 (3.83)	박희태 (3.82)	김형오 (3.71)	정세균 (3.25)	정동영 (2.86)
부산/경남 (128)	**박근혜 (5.34)**	이명박 (4.55)	김대중 (4.24)	이회창 (3.99)	정세균 (3.83)	김형오 (3.77)	유시민 (3.72)	박희태 (3.60)	정몽준 (3.59)	정동영 (2.99)
제주/강원 (33)	**김대중 (5.69)**	유시민 (4.81)	정세균 (4.77)	박근혜 (4.61)	정몽준 (4.11)	이회창 (4.10)	정동영 (4.06)	이명박 (3.93)	김형오 (3.43)	박희태 (3.12)

▣ 각 세대에서 가장 신뢰받는 지도자

젊은 세대는 김대중, 40대 이상 층은 박근혜 신뢰기반 강해.
그러나 박근혜 전 대표는 20대에서 3위, 30대에서 2위를 기록할 정도로 젊은 층에서도 2, 3위권을 기록했다는 점이 주목거리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우 20~30대에서 1, 2위, 40대에서는 박근혜 전대표에 이어 2위였고 50대 이상 층에서도 4위에 올라 세대차원에서도 상대적으로 신망을 유지하고 있다. 유시민 의원은 20,30대에서는 상위수준을 유지하지만 40대, 50대 이상에서는 4위권 내에 진입하지 못한 반면, 정세균 현 민주당

대표는 유시민 전 장관에 20.30대에서 다소 뒤처지지만 40대, 50대에서는 앞서고 있다. 다만 한나라당 후보로는 박근혜 전 대표를 제외하면 전 세대로부터 상위권에 포함되지 못해 한나라당 내에서는 박근혜 전대표의 독주가 예상된다. 중하위 권에 머물고 있는 이회창 총재, 정몽준 최고위원은 한나라당 지지성향이 많은 50대에서 각각 3,4위에 이름 올렸을 뿐 나머지 세대에서는 중하위권에 머물렀다.

신뢰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9위	10위
20대 (164)	김대중 (5.33)	유시민 (5.00)	박근혜 (4.58)	정세균 (4.11)	이회창 (3.58)	정동영 (3.55)	정몽준 (3.52)	김형오 (3.45)	이명박 (3.32)	박희태 (3.08)
30대 (177)	김대중 (5.04)	박근혜 (4.33)	유시민 (4.25)	정세균 (3.99)	이명박 (3.39)	정동영 (3.32)	이회창 (3.28)	정몽준 (3.07)	김형오 (2.74))	박희태 (2.57)
40대 (181)	박근혜 (4.90)	김대중 (4.85)	이명박 (4.06)	정세균 (3.95)	유시민 (3.94)	이회창 (3.47)	정몽준 (3.26)	정동영 (3.16)	김형오 (3.00)	박희태 (2.86)
50대 이상 (277)	박근혜 (5.79)	이명박 (5.56)	이회창 (4.19)	김대중 정몽준 (4.11)		김형오 (4.03)	박희태 (3.86)	정세균 (3.51)	유시민 (3.34)	정동영 (3.10)

[부록] 2007년-2009년 신뢰영향력 점수 및 순위

	영향력				신뢰도			
	2009	2009 순위	2007	2007 순위	2009	2009 순위	2007	2007 순위
김대중	4.87	3	4.48	3	4.74	2	3.96	4
김형오	4.02	5			3.38	8		
박근혜	5.61	2	5.70	2	5.01	1	5.38	2
박희태	4.01	6			3.18	10		
유시민	3.79	9	2.16	11	4.04	4	2.16	11
이명박	6.15	1	6.24	1	4.27	3	5.64	1
이회창	3.89	8	3.69	5	3.69	6	4.17	3
정동영	3.27	10	2.81	8	3.26	9	2.76	9
정몽준	3.95	7			3.55	7		
정세균	4.11	4			3.84	5		
김영삼			2.75	9			2.63	10
노무현			3.79	4			2.93	7
손학규			3.19	6			3.15	5
이해찬			2.95	7			2.80	8
한명숙			2.65	10			2.96	6

3. 기초분석2.

국정 효율성보다 균형과 안정 이루는 개헌 바란다
- 개헌에 관심 있다 59.5% 관심 없다 38.5%

정원칠 · 정한울

최근 헌법을 고쳐야 한다는 주장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국회의장은 시한까지 못박으면서 개헌논의를 본격화하자는 제안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개헌과 관련한 논의들 대부분이 거두절미하고 개헌의 시기나 권력구조 안을 둘러싼 논의에 집중해왔다. 그러나 국민들이 실제 얼마나 개헌문제를 얼마나 피부로 절감하고 있는지 개헌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와 이익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해하고자하는 노력은 충분치 않았다.

헌법을 고치는 개헌의 과정은 국민투표를 통해 완성된다. 국민투표를 통해 완성이 되는 만큼 국민적인 지지가 필수적이다. 또한 다양한 이견의 조정과 지난한 합의과정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필요조건이 충족되지 못한 상황에서 개헌 논의가 공론의 장(public sphere)에 제기될 경우 자칫 국론분열과 갈등이라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 개헌의 추진여부나 추진방향의 논의가 본 궤도에 오르려면 결국 국민들의 광범위한 관심을 이끌어냄과 동시에 개개인의 생활을 개선하고 국가적 차원의 경쟁력강화와 사회적 성숙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치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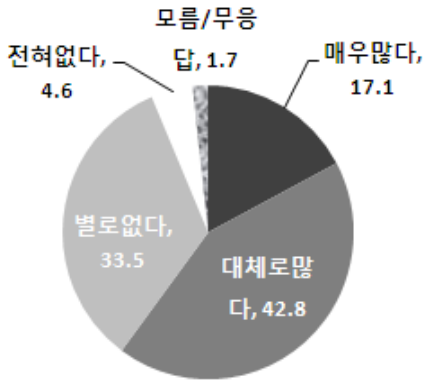
우선 조사를 통해 국민들이 개헌문제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 살펴보았다. 우리 국민 중 열 명 중 여섯 명(59.8%)가 개헌에 대하여 '관심이 있다(매우 관심이 많다 17.1% + 대체로 관심이 있다 42.8%)' 고 답했다. '관심이 없다(별로 관심이 없다 33.4% + 전혀 관심이 없다 4.9%)' 고 답한 국민이 38.5%였다. 무름/무응답은 1.7%였다. 최근 비정규직 법안, 쌍용자동차 사태, 미디어법 강행 통과 등 정치사회적인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시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국민들이 개헌문제에 적지 않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그러나 여전히 열 명 중 네 명은 관심이 없다고 답해개헌 논의에 대한 전 국민적 공감대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 선호하는 권력구조: 분권형제 우세 속 대통령제에 대한 지지 줄고, 내각제 늘고
분권형제 45.2% 〉 의원내각제 26.4% 〉 대통령 중심제 17.3%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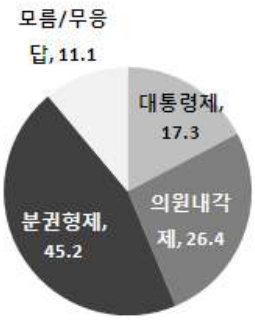
2005년 7월 동아시아연구원과 중앙일보가 함께 실시했던 개헌안 조사에서도 분권형제를 꼽는 응답비율(50.8%)이 가장 높았다. 그 다음이 순수 대통령 중심제(26.9%)와 의원내각제 순(20.0%)이었다.

그러나 이번 조사결과는 현행 대통령 중심제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계속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준다. 불과 17.3%의 국민들만이 대통령이 내치와 외치를 전담하는 순수 대통령제를 꼽았을 뿐이다. 내치와 외치 모두를 국회가 주도하는 의원내각제라는 응답비율도 26.4%로 4년 전에 비해 6.4%p 늘고 순수 대통령 중심제보다 많은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대신 대통령이 외치를 담당하고 국회가 내치를 담당하는 분권형제는 45.2%의 지지을 얻었다. 4년 전에 비해 다소 줄었지만 대통령에 대한 과도한 권력집중보다는 의회와 대통령의 권력분점을 통한 균형과 역할분담의 필요성이 여전히 다수 의견을 형성하고 있다. 모름/무응답은 11.1%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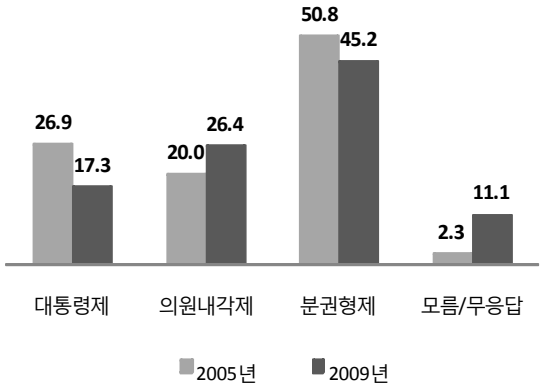
[그림1] 개헌 관심정도(%)



[그림2] 선호 권력구조(%)



[그림3] 05년 09년 선호 권력구조 결과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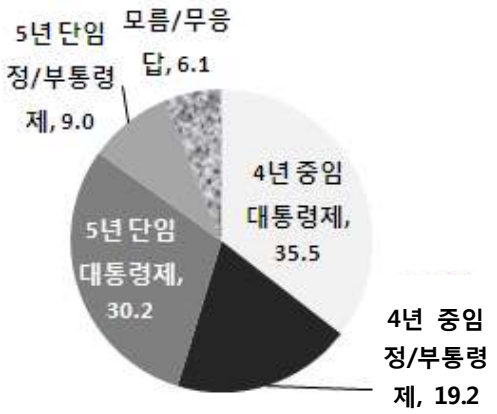
▣ 대통령제가 유지될 경우 현행 단임제보다는 중임제 선호
- 정부통령제 꼽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

다수 국민이 선호하는 분권형제도 대통령과 의회가 권력을 분점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대통령제는 유지되게 된다. 따라서 개헌을 통해 순수내각제를 채택하지 않는 이상 대통령제는 어떠한 형태로든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들은 대통령제가 유지되더라도 현행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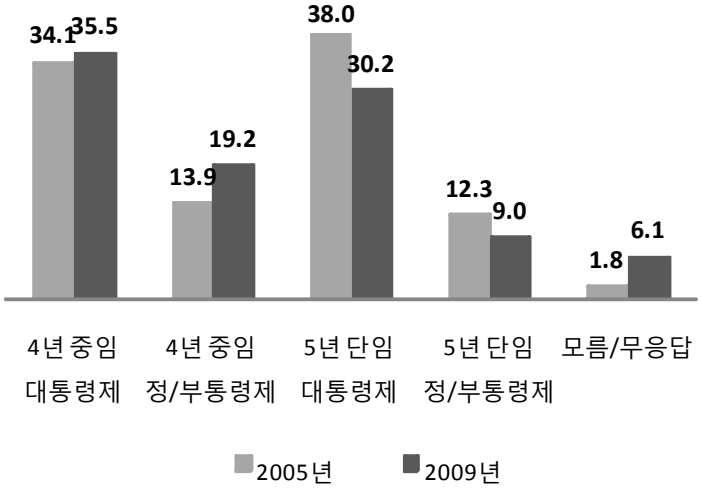
년 단임제에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리고 부통령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호응이 적었다. 대통령제의 구체적인 형식에 대해 우리 국민의 35.5%가 4년 중임 대통령제를 가장 선호한다고 밝혔다. 5년 단임제, 즉 현행 임기제를 바람직하다는 의견은 30.2%로 뒤를 이었다. 4년 중임 정부통령제나 5년 단임 정부통령제를 꼽은 경우는 각각 19.2%와 9.0%였다. 모름/무응답은 6.2%였다.

2005년 조사결과와 비교해보면 정부통령제 도입 여부와 무관하게 단임제에 대한 지지가 줄고 중임제를 꼽는 경우는 늘어나 이번 조사에서 중임제 선호가 는 순위가 바뀌었다. 2005년 조사에서 5년 단임제 지지가 38.0%로 가장 높았고, 4년 중임제가 34.1%로 뒤를 이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반대로 4년 중임제를 선호하는 의견이 34.5로 가장 많았다. 5년 단임제 지지율은 30.2%로 줄어 들었다. 현행 대통령제에 대한 변화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을 읽을 수 있다.

[그림4] 선호 대통령 중심제(%)



[그림5] 대통령 중심제 방식 비교 : 2005년-2009년(%)



▣ 개헌논의가 내포한 갈등요인-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개헌 입장 차 존재

- 집권세력 지지층 (보수, 한나라당지지, 이명박 지지층)일수록 대통령제 상대적 선호
- 야당 지지층일수록 분권형제 지지 높아

개헌안에 대한 계층별 입장을 살펴보면 몇 가지 갈등요인도 존재한다. 무엇보다 현 집권세력에 우호적인 계층과 비우호적인 계층간 권력구조에 대한 선호가 갈렸다. 대통령과 의회권력의 다수를 점한 현 집권세력의 기반이 되는 집단에서는 대통령제에 대한 선호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념성향별로 보면 현 정부의 지지기반이 되는 보수층에서 대통령 중심제에 대한 지지가 27.4%로 진보층(12.3%)이나 중도층(13.4%)에서보다 두 배 가까이 많다. 국정평가에서도 긍정 평가를 한 경우에서는 대통령 중심제를 꼽는 경우(29.6%)들이 부정 평가를 한 집단에서 내각제를 선호하는 비율 11.6%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비판적인 집단에서는 반대로 분권형제를 선호하는 비율이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지지정당에서도 차이는 비교적 뚜렷했다. 집권당인 한나라당 지지자들 중에서는 대통령 중심제를 꼽은 경우가 26.1%로 전체평균은 물론 다른 정당 지지자들의 결과와 비교해서도 가장 높았다. 내각제 지지도 32.4%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반면 민주당의 경우 분권형제를 꼽은 비율이 50.1%에 이르고 대통령제 지지는 10.7%에 그쳤다. 한나라당 지지자들의 결과와는 대비되는 결과이다.

성, 연령대, 학력, 거주지역 차이에 따라 선호하는 권력구조안에서 부분적인 차이를 보였다. 우선,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대통령 중심제를 꼽는 비율이 21.0%로 여성들의 13.6%보다 높았다. 연령대에서는 20대, 30대, 40대에서 분권형제에 대한 지지가 높았지만 50대 이상 층에서는 의원내각제 및 대통령 중심제에 대한 선호가 젊은 세대에 비해 높았다. 거주지 역시 차이점들을 드러냈다. 대통령 중심제는 인천/경기, 대구/경북 그리고 서울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비율을 보였다. 의원내각제는 단연 광주/전라에서 높은 지지를 받았다. 분권형제는 다른 지역보다 대전/충청과 강원/제주에서 높은 지지를 받는 차이를 보였다.

전체적으로 분권형제에 대한 선호가 전계층에서 다수의견을 점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치적 이해관계나 사회계층적 차이에 따라 개헌안에 대한 의견차가 존재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개헌안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되고 차기 집권을 둘러싼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경우 이러한 부분적인 차이가 정치적 국론분열과 사회적 갈등요인으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표1] 성/연령/학력/거구지별 권력구조 선호(%)

	대통령 중심제	의원 내각제	분권형제
성별			
남성	21.0	26.4	46.3
여성	13.6	26.4	44.2
연령			
20대 이하	12.9	24.3	55.4
30대	12.3	29.8	50.0
40대	21.9	18.0	50.3
50대 이상	19.9	30.9	32.8
학력			
중졸 이하	14.8	40.8	21.4
고졸	14.3	27.2	48.6
전문대재 이상	19.3	22.9	51.4
거주지			
서울	19.5	28.1	43.7
인천경기	20.5	21.5	46.5
대전충청	8.8	21.3	59.7
광주전라	11.4	36.5	31.3
대구경북	20.3	26.5	44.5
부산울산경남	17.6	28.7	43.7
강원제주	10.5	28.5	52.3

[표2] 이념/국정평가/지지정당별 선호 권력구조(%)

	대통령 중심제	의원 내각제	분권형제
이념성향			
진보	12.3	24.9	53.7
중도	13.4	29.6	48.9
보수	27.4	28.4	37.1
국정평가			
긍정평가	29.6	21.2	40.0
부정평가	11.6	29.6	48.9
지지정당			
한나라당	26.1	32.3	36.2
민주당	10.7	26.8	50.4
자유선진당	15.9	26.8	50.1
민주노동당	5.2	31.1	51.6
친박연대	13.4	25.8	49.0
창조한국당	23.8	23.7	29.5
진보신당	24.6	17.7	51.8
기타	10.6	29.7	49.1
지지정당 없음	17.7	21.4	4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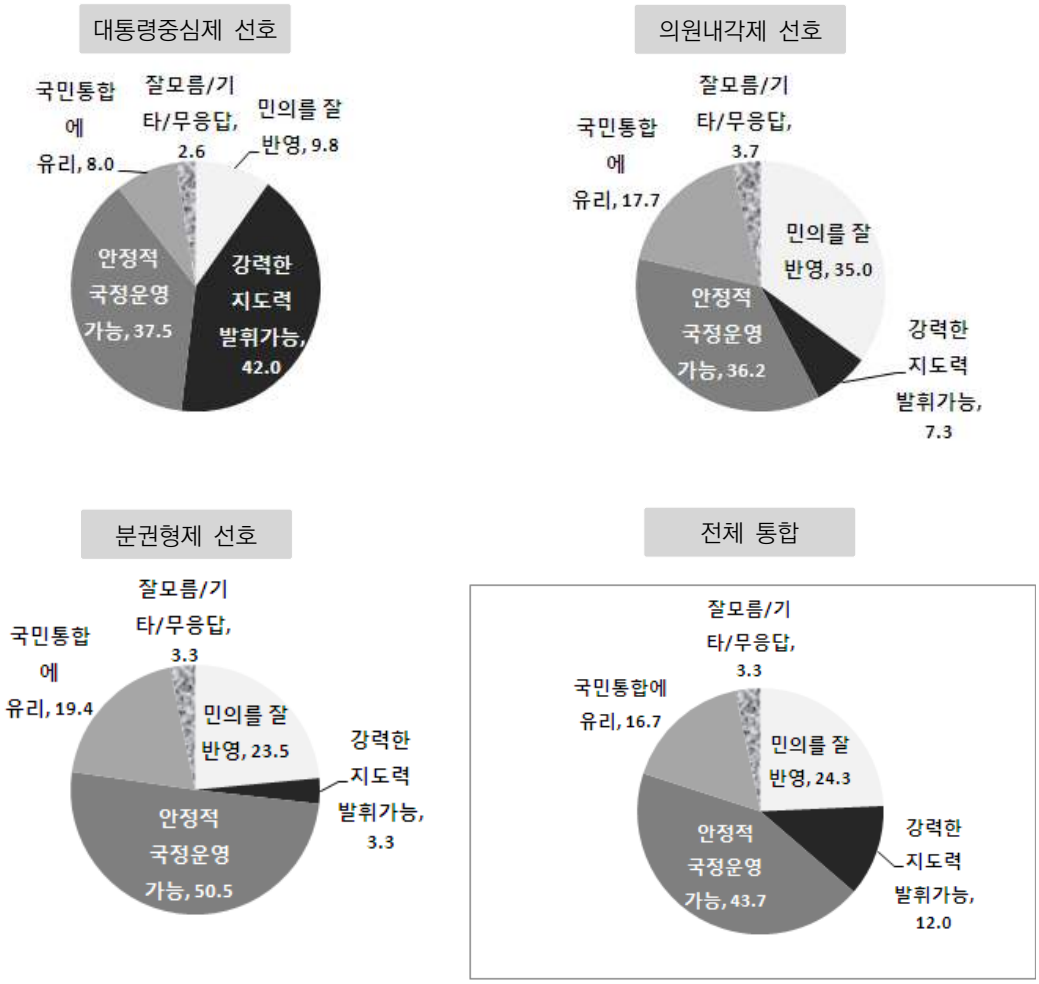
* 모름/무응답의 결과는 표기하지 않음

▣ 국민이 원하는 개헌 : ‘효율성’ 보다는 ‘국정 안정’ 과 ‘민의 반영’

개헌논의가 사회발전 및 국가적 성숙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바램과 가치에 부합해야 한다. 이러한 국민적 요구와 바람과 동떨어져 개헌논의가 진행될 경우 탁상공론으로 끝나거나 정치권 내부의 논란으로 그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 자신이 선택한 권력구조를 선호하는 이유를 물어본 결과 국민들이 개헌을 통해 얻고자하는 목표와 가치는 결국 안정적인 국정운영과 민의의 반영에 있다.

우선 권력구조 중 가장 많은 응답들이 몰린 분권형제를 선호한다는 응답자들의 경우 무려 50.5%가 분권형제에서 안정적인 국정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을 지지이유로 꼽았다. 23.5%가 민의를 잘 반영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라는 응답을 했다. 분권형제가 국민통합에 유리해서 지지한다는 응답은 8.0%, 강력한 지도력, 즉 효율적인 국정운영을 위해서라는 응답은 3.3%에 불과했다. 의원내각제 지지자 중에서도 36.2%가 국정안정을 내각제를 지지하는 이유로 꼽았고, 민의를 잘 대변하는 제도라는 응답이 35.0%에 달했다. 반면 국민통합에 유리해서라는 응답은 17.7%, 강력한 리더십 발위가 가능해서라는 응답은 7.3%에 그쳤다. 대통령 중심제를 지지하는 층에서도 42.0%가 강력한 지도력을 원해서라고 응답한 반면 37.5%라는 적지 않은 응답층이 국정안정을 위해 대통령제를 선호한다고 밝혔다.

[그림6] 특정 권력구조 선호 이유(%)



* 대통령 중심제 응답자 138명, 내각제 응답자 211명, 분권형 362명, 전체 합계 800명의 응답비율